

COMMENT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9 국가7급 행정학은 최근 치러진 다른 행정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9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변형포함)가 13문항 정도에 불과했고 그동안 빈출되었던 A, B급 주제에 대한 출제비율이 70% 정도였는데 이처럼 기출문제와 A, B급주제의 출제비중이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대체로 높아지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정책학과 재무행정에서 각 4문항씩이나 출제되었고 지방자치편에서는 1문항에 그쳤습니다.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환류	자치
3문	4문	4문	3문	4문	1문	1문

기출	변형	신경향	A급	B급	C급	D급
6문	7문	7문	10문	4문	5문	1문

이번 국가7급 행정학은 각종 행정이론이나 제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터치한 신경향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틀린 지문 찾는 것 보다 맞는 지문을 찾는 문제가 많아 체감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단편적인 암기나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약간 고전하였을 것이고 심화위주로 좀 깊이 있게 이해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그런대로 90점 이상 고득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18이나 문20처럼 지엽적인 회성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이는 난이도 조절과 9급과의 차별성 때문에 출제된 문제들로 보이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당혹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은 85점 이상이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행정학시험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난이도를 대체로 중상정도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난이도 조절의 방법으로 종합형문제, 숫자문제, 응용문제, 법령문제를 포함하여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는 경계문제(나올라 말라하는 언저리 부분), 즉 빈출범위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들(약간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경계문제)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시험에 임박해서는 기본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야겠지만 평소 심화이론이나 기출수업때는 그런 언저리(가장자리)내용을 다루어주는 완성도 높은 강의를 접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7급시험도 중반을 지나고 마지막 지방7급 시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지 않은 수험생들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지방7급 시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정진하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수험생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기본이론과 기출패턴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출강좌(7급3순환)를 한번 수강하실 것을 권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김중규 -

01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 ③

-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해설

③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은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공공선택론의 일종이다.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지역간 이동이 불필요해지므로 지방공공재에 대한 외부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 ① [오] 티부가설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이질적인 소규모 자치정부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오] 티부가설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④ [오] 티부가설은 모든 시민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이동(이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티부가설(발로 하는 투표)의 기본가정

- ① 다수의 지역사회(지방정부) 존재
- ② 완전한 정보
- ③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 - 완전한 이동
- ④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 작용 X, 규모수익불변
- ⑤ 외부효과의 부존재
- ⑥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재산세
- ⑦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 ⑧ 최적규모의 추구 - 규모가 크면 주민 유출, 작으면 주민 유입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154

02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였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기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 ①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 ②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 ③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 ④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해설

④ 주된 조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하는 제시문의 이중제동장치, 자기발전시설 등은 동등잠재력으로 행정의 가치 중 가외성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체제의 실패확률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① [×] 가외성은 형평성이 아니라 능률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 ② [×] 가외성은 중첩과 반복을 통하여 행정의 적응성·신뢰성·안정성·창조성을 증진시킨다.
- ③ [×] 가외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가외성의 특징

- ① 의의 : 불확실성(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여유분
 - 중첩 : 하나의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 (상호 의존·협력)
 - 중복 :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간여 없음)
 - 동등잠재력 : 주된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때를 대비한 보조조직
- ② 효용 : 적응성·신뢰성·안정성·창조성 확보
- ③ 한계 : 능률성(경제성) 저해, 자원의 한계, 갈등과 대립, 책임 모호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100

03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 ②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③ 대표하는 이론으로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 ④ 의사결정과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해설

② 후기인간관계론은 통제중심의 실적주의인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현대적 인사관리활동을 총칭한다. 즉, 조직휴머니즘이라 불릴 수 있는 후기인간관계론, 동기부여이론,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옹호자들로서 인간을 자아실현적 존재로 보고 Y이론적 관리(각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에 의해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과 참여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인본주의적 인적자원관리론 및 직장생활의 질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의 개인이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후기인간관계론이 아니라 상황론에 따른 복잡인에 해당한다.

- ☑ ① [○]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은 과학적관리론에 해당하는 인간관이며 자아실현적 인간관이 후기인간관계론에 부합한다.
- ③ [○] 후기인간관계론을 대표하는 조직이론가는 아지리스(C.Argyris), 리커트(R.Likert), 맥그리거(D.McGregor) 등이 있으며 맥그리거의 Y이론, 아지리스의 성숙인과 일맥상통한다.
- ④ [○] 후기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의 주된 활동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을 활용한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486

04 페로(C.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기술은?

«③»

- ① 장인 기술
- ② 비일상적 기술
- ③ 공학적 기술
- ④ 일상적 기술

해설

③ 페로(C.Perrow)의 기술유형론에서 과업의 다양성(예외의 수)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정보명확성)이 모두 높은 경우는 공학적 기술이다.

- ☑ ① [×] 장인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모두 낮은 기술유형이다.
- ② [×]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낮은 기술유형이다.
- ④ [×] 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은 기술유형이다.

Perrow의 기술유형

	분석 가능성	과제 다양성	조직구조	문제해결 & 직무수행	조정방법	정보기술
일상적 기술	높음	낮음	집권적	용이	계획	소량의 계량적 정보
공학적 기술	높음	높음	다소 집권적	직무수행 다소 복잡	환류	다량의 계량적 정보, 대규모 DB & 하이테크
장인적 기술	낮음	낮음	다소 분권적	문제해결다소 곤란	계획	소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터치
비일상적 기술	낮음	높음	분권적	매우 복잡, 곤란	환류	다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테크 & 하이터치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370

05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 ① 국가정보원 차장
- ②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③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④ 감사원 사무차장

해설

④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차관급) 공무원이지만,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다(감사원법 제19조). 최근 별정직의 일반직화 방침에 따라 별정직이었던 감사원 사무차장과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 ☑ ① [○] 국가정보원 원장과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② [○] 과거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직제로 2013.3 국무총리실이 폐지되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개편되었다. 현재 국무조정실 실장과 차장 및 비서실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정부조직법 관계조문

제20조(국무조정실)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및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④ [×]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지만,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 정무직공무원의 예시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원 •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¹⁾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국회 인사청문대상 공무원 ²⁾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장관),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청장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또는 이 를 보조하는 공무원(법령 등에서 지 정하는 공무원)	국회 사무총장·입법차장·사무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차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감사원 감사위원·사무총장, 국 무조정실장·차장, 행정 각부의 차관 및 처·청의 장, ³⁾ 국가 정보원 차장,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 권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차장, 국회의장·국무총 리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행정 ¹⁾ ·2부시장 ⁴⁾	•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⁵⁾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도지사 후보시 임명 예고된 자의 경우) 등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지만 법관신분이므로 특정직공무원임

2)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특정직공무원임

3)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특정직공무원임

4) 특별시가 아닌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임

5) 특별시가 아닌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관리관

☞ 혼동되기 쉬운 직위별 신분

기관	직위	신분
국회	국회의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무직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전문위원	일반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정무직
	헌법연구관	특정직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특정직
선관위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사무총장	정무직
	사무차장	일반직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정무직
	기획조정실장	별정직
	직원	특정직
국가보훈처	처장, 차장	정무직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처장	정무직
	차장	일반직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492

0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

- 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 ②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지역별 소관사무를 분담하여 전문분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을 야기하기도 한다.

- ☑ ①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자치권은 물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③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처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 ④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주민에 의한 통제와 책임 확보가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치행정 및 책임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장점	①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②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근린행정 ③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④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⑤ 전문행정
단점	①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②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③ 고객의 혼란과 불편 ④ 종합행정 및 현지행정 저해 ⑤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⑥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787

0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④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식적인 정책평가제도이다. ④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① [이] 정부업무평가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 포함)이다.
- ② [이]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이]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자체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 지원(행안부장관), 합동평가(행안부장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300

0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②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 ③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④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③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환경이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유동적인 경우 높은 환경적응도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속한 조직화나 표준화가 어렵고 명확한 계층 구분이 없어 갈등과 대립,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 완전한 조직은 아니므로 애드호크라시가 관료제 구조를 전면 대체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공존관계이다.

- ☑ ② [이] 유기적 구조는 대체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낮지만 복잡성의 경우 수평적 분화는 고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경우 수평적 분화는 일의 전문화나 기능별 분업이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 내지는 흐름별 분업을 말한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386

0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 ①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 ②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 ④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해설

④ 비기여제는 자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 ☑ ① [×] 비기금제는 기금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매년 국가의 예산 등에서 연금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과 방식으로 영국, 독일 등에서 채택한다.
- ② [×] 2009년 연금 개혁(「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준정비기관인 공공기관이므로 공무원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다.
- ③ [×]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중앙인사기관장인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고,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채용, 교육, 소청 등) 보수, 연금, 윤리, 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관리, 지방자치 지원, 전자정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554

10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직장내 훈련(OJT : on-the-job training)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고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 ③ 모의연습(simulation)은 T-집단훈련으로도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이다.
- ④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미국 GE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해설

① 직장내 훈련(OJT : on-the-job training)은 직장내에서 감독자로부터 지도·훈련을 받는 것으로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고가 달라지며 주로 1:1 멘토링 형식을 취하므로 일시에 다수를 훈련하기는 어렵다.

- ☑ ② [×]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외부환경과 차단시킨 상황 속에서 10명 내외의 비친근자로 구성된 소집단 내에서 자유로운 성찰과 교류를 통해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고,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감수성 훈련이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은 아니다.
- ③ [×] 모의연습(simulation)은 업무처리시 직면하게 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는 훈련방법이다. 여기에는 관리연습, 정보처리연습, 사건처리연습 등이 있다. T-집단훈련은 실험집단훈련(Training Group Training)으로 감수성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은 역할연기법(Role Playing)이다.
- ④ [×]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에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면서 배우게 하는 실천학습(성찰학습) 방법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방법은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520

1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②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낼 것인지에 주목한다.
- ③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 ④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해설

- ① 제시문은 시차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시차이론(Time Lag Theory)이란 인과관계에는 시간적 간격(시차)이 개입하므로 어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를 가져오는 데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이론이다.
- ☑ ① [×] 시차이론은 제도 개혁의 성과는 제도 도입의 순서 혹은 선후관계의 변화, 원인변수의 수나 작동순서의 변화 등과 같은 시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연구에 주목한다.
- ② [○] 시차이론은 인과관계에도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의 성과 평가나 행정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그 적정시기를 알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
- ③ [○] 시차이론은 정책평가나 행정개혁을 시도할 때 구성요소(변수)들 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는 물론, 충분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 시차이론은 시차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정책을 평가하거나 제도를 개혁하려는 우리나라에서 정책 집행이나 정부개혁과정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려는 접근법이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297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 ② 엘리슨(Allison) 모형 II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 ③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 ④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설

- ① 최적모형에서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은 ① 가치처리, ② 현실처리, ③ 문제처리, ④ 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 문제·가치·장원 등의 배분,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으로 나뉘며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 중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에 해당한다.

☞ 메타정책결정의 7단계

① 가치의 처리 → ② 현실의 처리 → ③ 문제의 처리 → ④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 ⑤ 정책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 ⑥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 ⑦ 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 ☑ ② [×] 엘리슨(Allison) 모형 II는 느슨한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SOP)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 ③ [×]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과 몇 가지 결과만을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순차적·연속적·단계적·직렬적으로 검토한다. 합리포괄모형에서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 ④ [×]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256

13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 ② 성숙효과는 실험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 ③ 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해설

② 성숙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 대상집단의 특성변화로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실험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측정(검사)요소(testing)에 해당한다.

- ☑ ① [오] 역사적 요인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환경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건 효과라고도 한다.
- ③ [오] 상실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 일부가 이탈하여 생긴 구성상 변화로 인하여 측정값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이탈효과라고도 한다.
- ④ [오] 선발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측정이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진실실험결과와 같은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 등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내 적 타 당 도	선발효과	집단을 구성할 때 선발의 차이로 인한 오류
	역사적요인	실험기간동안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사건효과)
	성숙효과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에 의한 오류(성장효과)
	상실요소	두집단간 구성상의 변화(탈락,이탈)로 인한 오류
	측정요소	측정(테스트)하 사실 자체가 영향을 주는 현상(시험요인)
	측정도구변화	측정도구의 일관성(신뢰도) 결여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저하
	회귀인공요소	실험직전 단한번 측정한 극단치에 의한 오류(실험직전반응효과)
외 적 타 당 도	오염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모방이나 누출현상
	호오돈효과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결과와 일반화 곤란 (실험조작반응효과)
	다수처리간섭	실험조작에 익숙해져서 일반화 곤란
	대표성 부족	집단의 사회적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 곤란
	크리밍 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실험집단에 배치하는 현상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304

14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 ②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 ③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해설

- ① G.Peters는 전통적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거버넌스모형을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내부규제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참여모형에서는 계층제를 문제 삼으며 하급관료와 시민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는 권한위양정부라고도 하며 탈계층적·수평적 조직이나 참여중심의 관리(TQM, 팀제 등)를 중시하며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② [X]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하는 연성정부모형으로 조직구조,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에 탈상구성과 유연성, 융통성을 추구하므로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어렵다.
- ③ [X] 정책결정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탈규제모형이다. 시장모형은 공공부문에 시장운영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경제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 서비스 공급 역할을 맡으며,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되며, 사회는 시장기제를 통해 국가를 직접 통제한다(「행정학」, 오석홍).
- ④ [X] 탈규제모형은 조직 내의 지나친 내부규제(통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조직 내 중하위 관리자에게 관리적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모형은 공공관료제 내부의 독특한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구분된다. ④번 지문은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 정부역할을 비판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탈규제모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구분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인식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개혁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
관리개혁	성과급, 민간기법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 개혁방안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험	기업형 정부
공익기준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조정방안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조직개편	관리자의 자기이익
오류수정	시장적 신호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화 방지	보다 많은 오류 수용
공무원제 개혁방안	시장기제로 대체	계층제 축소	임시고용, SES	내부규제 철폐
책임확보	시장에 의존	소비자불만에 의존	-	사후통제 의존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173

15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 ②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④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해설

- ①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의 형식이므로 구속력이 약하고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 ☑ ② [×]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예산 관련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 ③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본회의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 ④ [×]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자유로이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 역시 국회에서 수정이 가능하나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과 법률의 차이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공포함으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592

16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③»

- ①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 ②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 ③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 ④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해설

③ 윌다브스키(A. Wildavsky)는 경제력과 재정예측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문화적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의 예산문화론에 따른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이다.

- ☑ ① [×]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은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 예측력이 모두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이다.
- ② [×]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은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 예측력이 모두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이다.
- ④ [×]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은 국가의 경제력은 높고 재정 예측력이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이다.

예산문화론(A. Wildavsky)

		경제력	
		크다	작다
재정의 예측가능성	높다	점증적 예산 (선진국 중앙정부)	양입제출적(세입) 예산 (미국의 도시정부)
	낮다	보충적 예산 ¹⁾ (경제력은 높으나 예측가능성 및 행정력이 낮은 경우)	반복적 예산 (자개발국)

1) 보충적 예산 대신 점증예산과 답습(반복)예산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대체점증예산(alternative-incremental budget)을 드는 학자도 있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637

17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 ②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설

②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며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예산으로, 재정활동을 총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까지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적자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 ☑ ①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매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의 항구성·지속성(경직성)을 타파하고 투명성(가시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③ [×]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시행령 제9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도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므로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한다는 표현도 잘못이다.
- ④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621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 ① 로저스(E. Rogers)에 따르면,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 도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 ② 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 ④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수준 및 거시수준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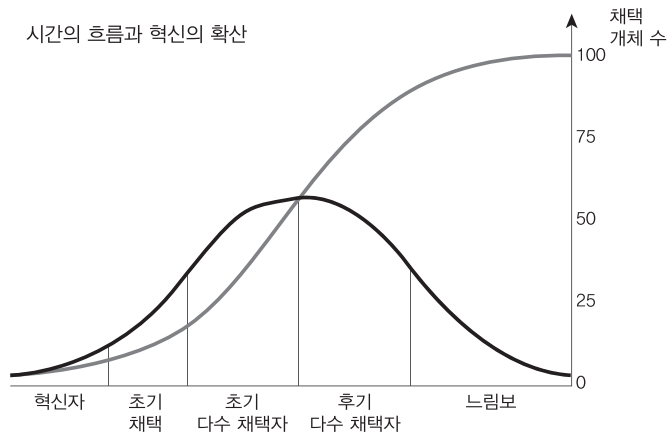
해설

- ③ 혁신확산과정은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선도자, 초기수용자, 초기 다수, 후기 다수, 지체자의 순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수용자는 소속 집단의 신망을 받는 자들로서 그들은 사회에서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 역할을 한다.

☞ 혁신확산이론에서 단계별 혁신수용자들의 특징

- (1) 선도자 : 모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채택에 수반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 (2) 초기 수용자 : 소속 집단의 신망을 받는 자들로서 그들은 사회에서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 역할을 한다.
- (3) 초기 다수 : 평소 변화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초기 수용자의 선도에 따라 변화의 초기부터 이를 수용하는 다수집단을 말한다.
- (4) 후기 다수 :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채택에 의심이 많으며, 초기 다수 등 다수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 뒤늦게 수용하는 성향이 있다.
- (5) 지체자는 일반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며, 전통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이 시장에서 완전히 채택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인다.

- ☑ ① [X] 로저스(E. Rogers)는 혁신확산이론에서 혁신을 채택하는 시점에 따라 혁신자(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early majority), 후기 다수(late majority), 느림보(laggards) 등으로 혁신 채택자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채택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을 x축, 채택자 비율을 y축으로 놓았을 때, 대체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종모양의 패턴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방식으로 다시 그리면 S자 커브의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①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 틀리다.



- ② [X]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은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은 인근 국가로 확산된다는 것, 즉 사회보장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은 발생원과 수용지 간의 관계에서 일련의 계층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새로운 제도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②는 공간적 확산이 아니라 계층적 확산이라야 맞다.
- ④ [X] 혁신확산이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이 확산되는 방식을 알려준다. 로저스(Rogers)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이 수용과정을 '인식 ⇒ 관심 ⇒ 평가 ⇒ 시험사용 ⇒ 수용 후 확산'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미시수준보다는 주로 중위 또는 거시수준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308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 ③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자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해설

-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산출·성과·결과를 중시하지만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
- ☑ ② [×]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으로 예산배분측면에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려는 예산의 배분적(부문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기술적 효율성은 운영상 효율성으로 부문내 효율성을 말한다.
- ④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전략적 자원배분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자원배분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이기는 하나 사전에 지출한도를 정하여 하향적으로 제시하므로 통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643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 ③

사람들에게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무작위로 K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한다. 이는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2명일 때와 8명일 때의 조합 가능한 위원회의 수는 같다.

- ① 고착화와 조정(anchoring & adjustment)으로 인한 오류
- ② 허위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인한 오류
- ③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
- ④ 사례의 연상가능성(retrievability of instances)으로 인한 오류

해설

- ③ 문제 박스의 내용은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에 해당한다.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합이 8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상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불확실성에서의 휴리스틱스와 오류

휴리스틱스에 의한 직관적 판단은 이론이나 통계학의 기초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때때로 많은 체계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대표성 휴리스틱스(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A가 B를 대표하는 정도나 A와 B의 유사한 정도에 의해 확률을 평가하는 오류(예 : 사물 A가 집합 B에 속할 확률, 사건 A가 과정 B에 기인할 확률, 과정 B가 사건 A를 발생시킬 확률 등)

(2)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빈도에 근거하기보다는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예에 따라 빈도 판단을 하는 것

- ① 사례의 연상 가능성으로 인한 오류 : 예가 친숙할수록, 현저할수록, 최근의 것일수록 연상하기 쉬어 발생하는 오류
- ② 탐색의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 특정 속성을 만족시키는 집단의 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오류
- ③ 상상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 적절한 예를 얼마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가가 빈도판단에 영향을 주는 오류(예 :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합이 8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상상되는 오류)
- ④ 허위상관으로 인한 오류 : 실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오류

(3) 고착화와 조정(anchoring & adjustment heuristics)

사람들은 대개 최초의 초기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답을 도출하는데 조정은 대체로 불충분하며 결국 서로 다른 최초 출발점은 서로 다른 대답을 유발하게 된다는 오류(예 : 첫인상이 최종 판단을 결정하는 오류)

참고

2019 7급 선행정학 p.101